
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2. 24.(수) 배포</p>		
		<p>2021. 2. 24.(수) 15: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2. 24.(수) 15:00 이후 보도 가능</p>		
답 당	교육부	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강정자 사무관 윤여진 ☎ 044-203-7256	과장 강정자	사무관 윤여진 ☎ 044-203-7256
		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과장 천범산 사무관 김홍오 ☎ 044-203-6313 사무관 김진옥 ☎ 044-203-6806		
		체육예술교육지원팀 과장 최윤정 교육연구관 김허중 ☎ 044-203-6641 교육연구사 박윤혁 ☎ 044-203-6330	과장 최윤정	교육연구관 김허중 ☎ 044-203-6641 교육연구사 박윤혁 ☎ 044-203-6330
		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과장 송윤석 사무관 박상현 ☎ 044-203-3112		
	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과장 이병철 사무관 권순관 ☎ 044-205-4219	과장 이병철	사무관 권순관 ☎ 044-205-4219	

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

- ◆ 일부 선수의 과거 학교폭력 전력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학교 운동부·체육계 전반의 폭력 근절 및 인권 감수성 향상
- ◆ 미래자동차·바이오헬스·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10만 명 양성을 위한 '혁신공유대학' 체계 구축
- ◆ 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문화 개선 등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「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」의 차질 없는 이행 추진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2월 24일(수)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.

「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」

- 이번 방안은 일부 프로스포츠 선수의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, 유사한 폭력행위의 재발 방지를 목표로 과거 사건에 대한 처리 기준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담았다.
 - 아울러, 체육계와 학교 운동부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, 실적을 위한 폭력이나 인권침해 행위 등을 묵인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도록 한다.

-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「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」(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, 2020.12.11.)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.

<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 주요내용 >

- 대회·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일수 감축
 ※ [2020학년도] (초)20일 (중)30일 (고)40일 → [2021학년도] (초)10일 (중)15일 (고)30일
- 학기 중 경기·대회의 주말 개최 유도
- 고입 체육특기자 전형의 학생부 반영비율 단계적 상향
- 연 1회 이상 폭력피해 전수조사 실시(필요 시 경찰·교육청 심층조사 추가 실시)
- 학생선수, 학교 운동부 지도자 대상 인권교육 의무화(학기당 1회, 회당 1시간 이상)

- 주요 내용으로는 ▲과거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 처리체계 구축, ▲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 확인 원칙 확립, ▲학교 및 스포츠계 현장의 인권의식 향상 등이 포함된다.
 - 정부는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작동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도출되도록 하는 한편,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세부과제별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.
- 유은혜 부총리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.
 - ※ 교육부·문화체육관광부, 별도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예정(2월 24일(수) 15시 20분)

「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기본계획(안)」

-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도래에 대응하여, 대학이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인력·시설 등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기업·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'혁신공유대학' 체계를 구축한다.

-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연합체(컨소시엄)를 구성하여 **분야별 표준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·운영**하고,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학사 개방을 추진한다.

□ 사업대상 선정·평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중 사업 공고를 통해 발표되고, 4월 중 참여대학(컨소시엄)을 확정할 예정이다.

※ 교육부, 별도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예정(2월 24일(수) 15시)

「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」

□ 이번 방안은 지난해 1월 관계기관이 합동 수립한 「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」의 **추진상황 점진 결과**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**2021년 이행 계획**을 담고 있다.

- 정부는 2022년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, 5개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.

- 특히, 이번 신학기에는 **유아와 초등학교 1·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 확대가 예정되어 있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점진**이 필요한 상황이다.

[2020년 ‘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’ 추진실적]

□ 무인교통단속장비(2,602대)와 신호기(1,225개소)를 대폭 확대 설치하고,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였다.

-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을 개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**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·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***하였다.

* (현행) 일반도로(승용차 기준) 4만 원, 보호구역 8만 원 → (개정) 보호구역 12만 원 (2021년 5월 11일 시행 예정)

- 또한, **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**을 유치원, 어린이집 등 현행 6종에서 **아동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**하는 한편,

- 대국민 공모로 **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선정**하고*, ‘**릴레이 챌린지 캠페인****’을 통해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* 1단 멈춤! 2쪽 저쪽! 3초 동안! 4고 예방!

** 교통안전 구호를 안전괄호로 표현한 사진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다짐을 참여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



□ 이러한 노력의 결과,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.7%, 50%씩 감소하였고,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.7%, 5%p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.



※ [출처] (교통사고) 경찰청 통계(2021년 2월) / (통행속도)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결과(2020년 12월) / (과속비율) SK텔레콤 내비게이션 앱 분석결과(2020년 9월)

[세부과제별 2021년 이행계획]

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

- 2022년까지 모든 보호구역에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, 무인 **교통단속장비 5,529대를 확충**하고 **어린이보호구역 3,330개소에 신호기**를 보강한다.

-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**어린이를 쉽게 인식**할 수 있도록 **옐로카펫 설치**를 확대하고(900개교), **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**을 위한 시범사업(29개소)도 추진한다.

- 학교·유치원 등에서 어린이의 집까지 이용되는 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,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「도로교통법」을 개정한다.

② 안전무시 관행 근절 및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

-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*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보호구역 전용 교통안전시설을 도입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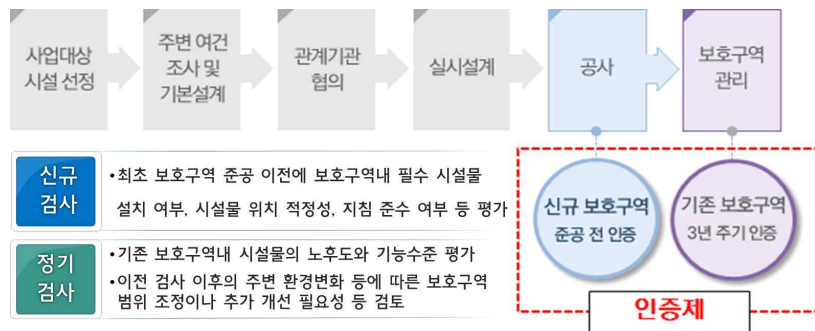
*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(도로교통법 2021년 10월 시행),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의무화(주차장법 2021년 7월 시행)

-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고(2,323대),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한다.
- 이외에도,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.

③ 어린이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

-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·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'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'를 하반기부터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.

<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 개요 >



- 또한,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, 유치원·학교·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한다.

- 정부는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계획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.